

대학의 교육현실과 교육개혁

유 필 무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육은 교육개혁 문제를 계기로 하여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대학들은 서로 앞뒤를 다투어 여러 가지 '개혁방안'과 '자구책'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교수업적평가제와 강의평가제의 도입 및 강화,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신입교수채용, 재정확보를 위한 발전기금 모금운동, 유사학과 계열화 및 통폐합 등 대학들은 이미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전선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논의와 노력은 결코 임기응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좀 더 심도있게 대학 문제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정립이 선행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주도하는 대학개혁, 부작용이 뒤따른다

우 선은 대학이 오늘날 이처럼 갑자기 그리고 유별나게 개혁적이 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교육시장 개방정책과 단계적 대학자율화 정책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개혁 조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부가 대학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줄이고 대학입학정원 등 대학교육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대학 자율에 맡기려고 하는 자율화 조치이다. 이러한 대학 자율화는 지방자치제의 도입, 확대 정책

과 맞물려 지방국립대를 지방공립대로 전환시키는 안으로도 발전되고 있다.

교육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으로부터 대학간 자율경쟁에 내맡기는 경쟁주의 정책으로 궤도를 바꾸었다. 정부는 작년부턴 경쟁력 있고 경쟁에 살아남는 대학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은 대학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94년말에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96학년도부터는 이를 지방사립대에 적용하고, 97학년도부터는 교수 확보율 등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자율권을 확대하며, 99학년도부터는 모든 대

학이 증원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각 대학 당국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개혁압력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인정제는 각 대학의 종합적인 '경쟁력' 점수로 인식되고, 위기 타개의 구체적인 방안과 개혁지표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대학개혁의 원인을 좀 더 멀리서 찾아 본다면, 그것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근대화와 세계화라고 하겠다. 주로 공업제품의 수출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해 온 한국사회는 이제 수출·입 규모가 단위국가로는 세계에서 16, 17위를 기록할 정도로 커졌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상품의 주요 판로가 되어온 선진 제국들에게 농산물시장과 교육, 서비스시장 등 시장개방 압력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의 교육개혁 '돌풍'은 교육적인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은 정부가 대학교육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교육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동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대학 자율화 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대학입학정원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점, 그리고 대학평가인정제를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 혹은 경쟁력을 평가하여 대학의 자율화 시기 및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재정형편이 좋지 못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들로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받거나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위해 '선착순'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부족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정충당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부의

정책은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학은 당나귀가 되어있는 형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론(異論)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교육을 기본적으로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대학경쟁력 강화 혹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개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과열된 입시 위주의 교육열과 학벌주의, 명문주의, 그리고 부담스러운 등록금과 과외비로 휘청거리는 학부모나 학생, 그래서 중류 이상의 가정형편이 되어야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 불평등의 문제 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산술적으로 대학진학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계산이 옳 맞는다고 하더라도, 고학력화 현상과 학벌주의가 지속되는 한, 사태는 호전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처럼 '도산'할 수 있는 대학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사회적 여파는 또 누가 감당할 것인가.

둘째, 대학 자율화를 통해 정부가 만일 대학교육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 교육은 마치 자유경쟁 자본주의 아래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무정부주의와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는 항변들이 제기될 것이다.

정부는 교육과 관련해서 저야할 책임과 권한을 정립해야 하며, 특히 교육도 기회이자 복지라는 관점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대학을 대부분 국립으로 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가경쟁력이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본받을 것이 많다.

셋째, 대학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미 상당수의 대학들에서는 대학 당국자 몇 명에 의해 개혁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발표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교수와 학생들의 빈축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대학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대학개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정부와 대학당국이었으며,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은 '동원'되거나 소외 혹은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교수는 물론 학생들도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인간에게 아직 발아하지 못한 자아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인성의 자유로운 발달과 실현을 돕는 사회적인 과정의 하나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는 사회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나아가서 개인들을 문화적 정치적으로 사회에 통합시키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노동력을 갈고 닦아 배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취업에 필요한 재능과 자격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인 동시에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노동력을 생산,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교육이 지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그리고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관점과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거나 방향정립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

교육은 오늘날 상품의 하나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사설학원에서는 교육이 명실상부하게 상품으로 제공되고 매매된다. 참고서, 부교재, 과외학습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그것도 일정부분은 상품으로 취급되고 거래되고 있다.

학생들은 매학기 2백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고 책값, 회비, 용돈 등 월 30~50만 원 가량의 비용(연간총액 약 1천만 원)을 들여가며 대학을 다니고 있다. 대학 졸업장의 가격은 이렇게 보면, 약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 4년이라는 시간과 정력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합친다면, 그보다 훨씬 값이 비싼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1차적으로는 최소 4천만 원짜리 대학 졸업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위권 대학이나 지방대학의 졸업장은 아예 거들며 보지도 않거나 제값을 쳐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배부른 장사인가.

다른 한편, 학교는 그만한 등록금을 받아야 그나마 최소한의 대학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실정이다. 94년도 사립대학의 경우 운영수입의 70% 가량을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경우도 50% 가까이를 학생에 의존하고 있다. 그 정도만큼 '수익자부담원칙'이 사립과 국립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이 많이 오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게 되고, 학생을 무제한으로 뽑으면, 그만큼 사정이 좋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입학정원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교육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맡기는 경우, 돈있는 사람만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만일 이런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는 교육에

관한 한, 1인당 4천만 원의 대학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상류층 자녀들의 이익만 실현되는 것을 방조하는 셈이 된다. 잘사는 집 아이들만 예뻐하는 형세가 된다.

둘째는 평균 4천만 원짜리 고급의 노동력과 인력 그리고 고급의 기술과 지식을 공급받는 대표적인 수익자, 기업들과 국가기관들은 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이익만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공평하게 총액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이 수익자들이 장학금 등으로 부담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공평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거두어, 대학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교육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소위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독일의 경우,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교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력수급의 채널이 되는 교육과정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취업, 기술과정이고 하나는 고등교육과정이다. 취업과정은 10년에 걸친 초·중등학교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졸업후에는 곧바로 취업한 상태에서 무상 의무교육인 직업학교를 2년간 더 다녀야 한다. 아니면, 기술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년에 걸친 무상 의무교육을 받고 고급기술직으로 취직한다. 고등교육과정(김나지움)은 일반 중·고등학교로 9년으로 되어 있으나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초등과정 4년을 합치면 13년으로 되어있다. 이 과정을 나와야 일반 정규대학에 진학할 자격이 생기지만 의학, 경제, 경영, 법학 등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입학 시험도 없다.

대학들은 종교계 학교 등 특수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주립대학,

즉 공립으로 되어 있으며, 등록금 없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진학 인구는 진학 적령기에 해당하는 인구의 1/3 정도로서, 1990/91학년도에의 경우 대학신입생은 31만 8천 명이었으며, 대학생 전체 인구는 170만 명에 달했다. 통일독일의 전체 인구가 7천 9백만 명선이기 때문에 대학생 인구는 약 2%이다. 대학에서는 이런 인구를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에게는 광범위한 생활비 보조가 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형편이 안돼 생활비가 모자라는 학생들의 경우는 연방교육장려법(BAföG)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1/2은 장학금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1/2은 학자금 융자로서 나중에 취업한 이후 갚아 나가도록 되어 있다. 1991년도의 경우, 구동독지역의 대학 신입생 가운데 3/5이 이 장려금을 받았고, 구서독지역의 경우는 1/5 정도가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 가정 출신의 대학 신입생이 1952/53학년도에는 겨우 4%에 불과했으나, 1987년 여름학기에는 19%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의,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육 개혁이 과연 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교육에도 '교육공개념'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앞서의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교육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시각에서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공공선의 하나로 보아도 국가경쟁력, 대학경쟁력에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가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재정

적으로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아도 교육제도와 내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가경쟁력 등을 확보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대학교육의 재정문제를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기회를 사회계층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줄 수 있는 방식의 하나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대학교육을 국가나 주정부가 주관하더라도 대학교육과 교육행정은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위 ‘대학교육개혁’은 각 대학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면 커다란 개혁,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 교육개혁의 주체에는 사실상 국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국가가 대학들에 대해 “교육개혁, 내 멋대로 해라. 나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특히 재정지원문제에서 발뺌을 한다면, 개혁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히 그려진다. 이 경우, 대학 자율화란 대학들로 하여금 좋은 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재정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무한경쟁을 벌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대학은 요즈음보다도 더 교육을 상품시하게 되고, 대학간 서열화현상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과열입시경쟁 및 과외공부 등 부작용도 한층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들간의 경쟁현상은 이미 치열해지고 있다. 대학들은 - 주로 학생유치를 겨냥한 - 적극적인 대학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재정적인 자구책의 하나로 발전기금 조성에 동분서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대학들은 아예 대학발전기금 목표액을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두거나 대학총장이 나서서 각종 후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모금목표액

은 고려대가 5천억, 연세대는 3천억, 서울대는 1천 6백억, 성균관대는 1천 5백억, 숙명여대는 1천억이라고 한다. 고려대는 교수, 직원에게 ‘학교발전채권’을 판매한다고 하며, 연세대는 93, 94년 2년 사이에 벌써 1천 4백억여 원의 기금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대는 95년도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발전기금을 내줄 것을 요청하는 총장 명의의 통신문을 보내고, 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회도 가졌다고 한다.

앞서 우리는 독일의 예에서도 보았지만, 서구의 주요국가들은 대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경향이 강하다.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경우, 거의 모든 대학이 국립이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않는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 대해서도 재정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의 사립대학에서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대학운영비 전체의 75%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보조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뿌리는 과외비만 해도 연간 4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 액수만 거두어 200개 대학에 나누어 준다면, 대학들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2백억 원씩의 기금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계산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대학입시를 없애고 이를 위한 경쟁도 없앤다면, 그 이상의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여유있는 돈’(?)들을 세금으로 거두어 국가가 공교육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없애는 방법 외에도 국방비의 한두 항목을 줄인다든지, 기업들에게 수익자 부담금 명목으로 특별과세를 한다든지, 교육재정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 근래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일반인,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한국의 교육지표』의 결과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영역별 투자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59%가 '교육' 부분을 들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19%), 경제(8%), 국방(3%) 순의 응답을 보였다고 한다. 국가는 교육개혁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결과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고를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는 대학을 '교육시장'에 내팽개치는 식으로 괴롭히지 말고 '스폰서'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는 우리 국토를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활용해야 하듯이, 교육시설과 대학을 공공시설과 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교육공개념'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가 교육공개념에 입각해서 재정스폰서로 나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육을 좌우하고 국가의 시너로 전락시키거나 획일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도 소유/경영의 분리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재정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고, 대학경영과 교육은 전문가들에게, 즉 대학에게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낭비와 비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앞서 예로 든 서구 사회들의 경우는 잘만 되어가고 있으며, 선진국 소리까지 듣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교육개혁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정권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획일적 이데올로기교육의 잔재를 청산해야 하고, 대학입시 위주의 초·중·고 교육과정과 과외공부를 통해 익숙해진 주입식, 암기식 학습습관을 고쳐야 한다. 더 높은 지위를 향한 출세수단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풍조와 일류병, 취직을 향한 실용적인 관심과 아카데

미즘 사이의 간극 등 고쳐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요즈음 대학사회에서 일고있는 개혁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개혁의 방향과 조건에는 커다란 문제들이 잠복해 있다.

경쟁력 향상이라는 방향설정도 잘못된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조건없이 대학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개혁하도록 하는 '대학 자율화 정책'은 일면적이고 잘못된 자율화이다. 이것 외에 다른 한 가지 크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일반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소외, 배제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다.

요즈음 여러 대학의 경우, 일부 보직교수들이 단기간에 소위 개혁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교수 일반은 물론 해당학과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터뜨려 말썽을 빚어내고 있다. '고지를 빨리 점령'하기 위한 졸속행정의 결과라는 빈축도 사고 있다. 모대학에서는 또 전 교수들과 동창들에게 발전기금을 반강제로 징수하고 있어 불평을 사고 있다. 개혁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는 또 학생들이 대체로 소외, 배제되는 경향이 있고, 학생들 입에서는 '대학의 주체가 누구냐'는 불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학생들이 소외, 배제되는 현상은 개혁은 물론 대학교육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학생도 '대학교육의 주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이견을 갖는 사람들은 아마도 학생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볼 것이다. 그러나 객체라고 하더라도 요즈음 횡행하는 상업주의 원리로 '번역'을 한다면, 그들은 곧 '고객'이다. 상업주의 원리에 따르면, '고객은 왕'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심지어는 사장 결재난 옆에 고객 결재난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 수준이 그런 문제들을 함께 상의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못하다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학생이 교수보다야 수준이

낮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객 수준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왕은 왕'이다. 학생 고객을 '왕'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적인 교육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교육개혁 또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이라면, 고객의 바람과 욕구가 계산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그래야 소비자가 바라는 모델과 '뱅크제품'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팔무/서울대 사회학과와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수학한 후, 자유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며, 학보사 주간을 맡고 있다. 계간학술지 『경제와 사회』 편집주간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산업사회연구회 부회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공저로 『지배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춘천리포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근간) 등이 있다.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0-7942, 783-3891,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교수담론(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 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 사례)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